

2006년 대한산업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산업의학회(회장 김해준)는 9일(목)~10일(금) 양일간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우리나라 직업성 암의 현황과 관리방향/농작

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제로 200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독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회장 박두용)은 7일(화)~8일 양일간 국제세미나와 안전보건 전문가 초청강좌를 개최한다.

근로자 참여적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한·독 국제세미나는 '한국과 독일의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제도'

에 관한 주제로 7일 국민일보사 1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조선업의 안전보건관리 및 정책방향' '사업장에서 심리적 부하: 작업관련성 스트레스의 원인과 영향 및 대책'에 관한 주제로 개최되는 독일 안전보건 전문가 초청 강좌는 8일 공단 5층에서 열린다.

노동부, 위험상황신고 24시간 상시접수 체계 구축

내년부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24시간 이내' 보고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토록 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점검을 통해 법위반 증거 채집, 추가적인 사고 확산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

서에 설치·운영중인 '위험상황신고실'의 신고 전화(1588-3088) 운영도 개선하였다. 야간·휴일 신고 시에는 산업안전과장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되어 산업안전과장이 직접 위험상황신고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선조치로 중대재해 발생 등 위험상황 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야간·휴일시 산업안전과장 직접 접수제」 운영으로 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 조치가 용이해졌다.

내년부터 지게차 운전자 안전띠 의무착용 시행

내년부터 작업장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고, 사업주도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지게차 전도·전복에 의한 사망 재해를 보면 '03년 19명, '04년 26명, '05년 28명 등 총 73명에 이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띠 착용의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

편, 지게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건설 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계단을 작업장 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1.2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토록 하였다. 아울러 전기기계·기구 보수 작업 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70cm 이상의 작업공간과 150勒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도록 하는 개선조치도 마련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천만원미만 전기공사 등에 확대 적용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 행정예고

오는 11월부터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이 적용될 경우 소규모 공사에 연간 84억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임의규정인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월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확인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특수 작업복 구입과 타워크레인·리프트 기계기구의 안전컨설팅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고시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06.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